

쟁점(I):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유

사회적 자유의 추구로 나가야

권혁범(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자유란 근대적 차원에서 두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자신의 행위와 사고에 있어서 타인이나 집단 또는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서의 자유가 있다. 두 번째로 의미는 자기 자신이 삶의 주체라는 의미에서의 자유다. 이 둘은 각각 다른 차원의 자유를 의미하면서도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다.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이사이아 벌린(Isaiah Berlin)은 전자를 ‘네가티브’ 후자를 ‘포지티브’ 자유로 분류한다.

자유는 이런 의미에서 사적 영역의 출현과 개인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나 영역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그것을 보장해야 할 사회적 규범이나 이념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로 결사, 집회, 사상, 표현, 언론의 자유 같은 정치적 의미를 띠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가 신흥 상공업자들의 중세도그마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차원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사적 재산을 소유하고 승계 할 권리, 시장에서 권력의 자의적 개입 없이 물건을 사고 팔 권리 등을 포함하는 경제적 의미를 갖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의 자유를 둘러싼 많은 문제는 아직까지도 개인이 주체로서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한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조건에서 온다. 물

론 서구에서도 그것은 ‘영원한’ 미완으로 남아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지만 한국에서 ‘개인’과 ‘자유’는 매우 불완전하다. 한국에서 근대국가의 건설은 개인적 주체의 형성과정 없이 기술적 근대관리체제를 개발 독재의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민국가 건설과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통, 식민지경험 및 분단, 독재 등으로 인해 자유, 평등, 개인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가치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에 종속된 하부단위로서의 ‘국민,’ 혈연적 동질성에 대한 상상력의 극대화를 통해 각인된 ‘민족,’ 사회구성원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결합을 저해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실체로서의 ‘국가,’ ‘안보,’ ‘집단,’ ‘국익,’ ‘국기’ 등에 대한 강박적 인식은 근대적 자유주의가 형편없이 결여된 상황을 보여준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고전 『자유론』의 핵심은 개인은 그의 행동에 대해, 그것이 오로지 그 자신만의 이익에 관계되는 한(타자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사회 및 여타 집단체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자유에 대한 의식이 한국사회에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가? 그것은 ‘서구적’인 개념으로 폄하되기 일 수다. 한걸음 나아가 개인의 자유, 권리, 사생활이 일상적으로 침해되고 그것이 ‘국가,’ ‘민족’ 혹은 다양한 집단의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 혹은 자유주의는 여전히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

- 언제나 특수한 자신의 이익보다는 전체(국가)의 이익을 우선 시해야 한다.
- 지나친 자유는 방종에 이른다.
-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자.
- ‘단체생활’에서 ‘개인행동’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런 담론들은 자유에 대한 근대적 관념이 억제되고 있는 한국적 상황을 잘 보여준다. 여전히 우리는 집단의 부속, 부품으로서의 개인이 중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때의 개인은 ‘백성’, ‘가문’, ‘민족’, ‘국민’, ‘집단’의 일부다. 자유와 평등을 근간으로 한 자율적 개체로서의 인간 의식은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보편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했다. 특히 안보를 위해서는 모든 다른 권리, 특히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에 관련된 권리는 유보될 수 있다는 아니 유보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암시된다. 특히 ‘자유주의 수호자’들이 주저 없이 국가, 안보, 국익, 국가정체성을 들고 나오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 자유주의의 핵심은 개인이며 그 개인의 권리와 생존이 다른 어떤 집단적인 가치에 우선한다는 인식체계다. 개인을 위해서 국가도 공동체도 안보도 모두 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정치문화는 되려 자유주의적 언행을 억누른다. 개인이 국가보다 우선한다, 개인의 권리가 국가안보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은 문화적 헤게모니를 갖고 있지 못하다. 물론 민주화 이후에 국가권력의 자의적 횡포나 억압에 의한 자유의 침해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면 자유주의의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자유의 확대의 함께 과연 ‘포지티브 자유’는 확장되고 있는가?

신자유주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물결 속에서 국가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 조정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

는 것이 자유의 핵심이라면 되려 민주화 이후의 신자유주의 정책 및 제도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한국형 신자유주의는 일종의 자기모순을 안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자유를 억제하는 국가주의적 정치관과 무제한적 자본의 자기확대를 자유로 이해하는 경제적 이념을 동시에 조합하고 있다. 특히 국가, 국익, 국방, 국가안보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구시대의 유령이 문화적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 그것에 대한 도전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및 '색깔론'의 과장된 언어로 봉쇄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유보다 빵이 중요하다”는 속설은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다. 이런 담론은 주로 개발독재 시대에 재벌중심의 압축적 성장과 정치적 억압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속에서 주변부 산업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노동자, 이주노동자들, 노인, 도시빈민, 청소년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이들을 시장게임에서 퇴출당한 사회적 패배자로 몰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들에게 정치적 의미에서의 자유 확대는 별다른 직접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삶의 주체로서 설 수 있는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를 사회적 자유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는 공권력에 의한 개인주권의 부당한 침해를 넘어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꾸려갈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평등의 의미와 중첩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자유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완전한 시장경제, 국가의 성가신 간섭과 규제를 반대하는 경제적인 의미만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규제

는 되려 ‘자유’를 위협하는 ‘좌파적 행위’로 매도되는 담론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정치로부터 경제를 ‘해방’하려는 시도가 ‘자유’와 동일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결코 ‘경제’는 중립적인 보편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질서에 있어서 ‘순수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원리라고 강변한다면 그런 차원의 자유는 고전적 의미에 있어서의 사회적 자유와 충돌한다. 이런 점에서 정치로부터의 ‘해방’은 경제적 강자의 이익 독식을 강화할 ‘자유’의 확대일 뿐이다. 헤게모니 싸움에 있어서 신자유주의들이 주장하는 자유가 자본을 갖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의 기본적 자유를 되레 억누르고 있다면 점점 동의의 영역을 넓혀가야 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불신 및 회의도 강해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한국형’ 자유의 딜레마가 있다.*